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
	배포일시	2018. 8. 16.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 ·과장 김 인, 사무관 신영우, 주무관 이경순 ·☎ (044) 201-4602, 4606
보 도 일 시		2018년 8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## 사람·현장 중심 철도 구현...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철도운영기관·사후대응 중심에서, 국민 안전 눈높이 수용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현행 『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(‘16~’20)』(이하, 제3차 종합계획)에 대한 변경\*에 착수한다.

\* (법적 근거) 철도안전법 제5조

- 이번 변경은 ‘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\*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, 철도안전산업 활성화,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,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,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.

\*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(‘11~’15)도 ‘14년에 변경한 바 있음

-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
  - 우선,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,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,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內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,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·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, 사물인터넷·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·시설·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,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\*을 실시('18.8월중 발주 예정)할 예정이다.
  - \* (용역기간 / 용역금액) '18.10월~'19.4월(약 7개월) / 8,000만 원 이내
-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, 『철도안전법』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·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, '철도산업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,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신영우 사무관(☎ 044-201-46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